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태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348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5. 2.

발 의 자 : 김태년 · 박균택 · 윤준병  
이강일 · 윤후덕 · 문진석  
박희승 · 채현일 · 송옥주  
이학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 등의 사유로 재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한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재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어, 기소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경우, 국가를 대표하여 수행해야 할 헌법상 책무와 공판절차가 병행되기 어려워 국정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.

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, 대통령이 직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으나, 재직 전에 받은 기소에 대해서는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, 헌법상 취지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,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여, 형사소추의 범위를 재판절차에까지 일관되게 적용하고자 함.

이를 통해 헌법 정신을 충실히 구현하고, 대통령의 직무수행의 안정성과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(안 제306조제3항 신설).

##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그 직이 종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第306條(公判節次의 停止) ① .</p> <p>② (생   략)</p> <p><u>&lt;신   설&gt;</u></p>     <p>③ (생   략)</p> <p>④ (생   략)</p> <p>⑤ (생   략)</p>	<p>第306條(公判節次의 停止) ① 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대통령이 재직 중인 경우에는</u> <u>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</u> <u>한 경우를 제외하고는, 그 직이</u> <u>종료될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</u> <u>지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 <p>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</p>